

#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여성 노동시장 영향 연구  
과제책임자 김종숙 선임연구위원

## 여성고용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

### 초록

- ◆ 우리나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예산은 2018년에 비해 2021년 약 59.4% 증가. 정책 참여자 수에서, 남녀 모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참여 비중이 감소하였고 직접일자리 비중이 증가하였음. 관측기간 중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의 주요 목표인 고용가능성 제고보다는 직접 취업을 지원하는 인건비 부담으로 정책의 비중이 옮겨갔음을 의미함.
- ◆ 2018~2019년 고용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분석한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6개월 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훈련+취업알선+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집단, 훈련+실업급여 집단, 훈련+알선 집단 순으로 높았음. 보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훈련+실업급여의 정책 조합을 받은 집단의 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남.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분석 결과는 전체 분석결과와 유사하지만 아주 일관되지는 않음.
- ◆ OECD 국가의 1990~2020년도 불균형 패널자료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ALMP의 효과가 여성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지출액 효과는 유의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사업별 지출에서는 고용서비스가 매우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고용서비스 정책이 여성들에게 더 유용한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음.
  - 1) 패키지 유형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개별 정책에 비하여 유용하므로 개인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 필요
  - 2) 구직자 대상의 정책은 여성의 경력단절 등에 따른 장기비취업을 고려할 때 사각지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정책의 목표를 보다 넓게 잡는 활성화(activation) 정책 필요
  - 3) 여성들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서 다수를 차지하므로 취약성을 식별하여 이에 기반을 둔 노동시장 정책 필요
  - 4) 고용서비스 정책의 여성노동시장 참여 면에서 유용성을 고려하면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 과정에 성인지적 검토 필요

<표 1> 정책참여의 활용이 취업 및 보수에 미치는 영향(매칭표본)

	6개월 이내 취업		12개월 이내 취업		보수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훈련	-	-	-	-	?	?
알선	+	+	+	+	-	-
실업급여	+	+	-	+	+	+
훈련+알선	+(3순위)	+(3순위)	+(3순위)	+(3순위)	?	?
훈련+실업급여	+(2순위)	+(2순위)	+(2순위)	+(2순위)	+	?
알선+실업급여	+	+	-	+	+	+
훈련+알선+실업급여	+(1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	-

<표 2>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효과

	모형 1		모형 2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직전년도실업률(전체)	+	+	+	+
인플레이션	?	-	?	-
외국인직접투자	+	+	+	+
GDP(1인당) 로그값	-	-	-	-
GDP 성장률	-	-	-	-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지출(GDP 대비 (%))	?	?		
고용서비스 지출(GDP 대비 (%))			-	?
직업훈련 지출(GDP 대비 (%))			?	?
고용보조금 지출(GDP 대비 (%))			?	?
직접일자리 지출(GDP 대비 (%))			-	-
창업보조금 지출(GDP 대비 (%))			+	+
고용보호법제의 경직도(버전1)	?	+	?	+
노동조합조직률	?	+	?	?
텍스웨지	?	?	?	?
합계출산율	?		-	
성별 고용률 격차	?		-	
성별임금격차	?		?	
어머니 유급육아휴직기간	?		?	
아버지 유급육아휴직기간	?		?	
2세 이하 보육시설 이용률	?		?	
가구 소비지출	?		?	

주: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가족관련 변수들을 활용함.

## 배경 및 문제점

● 노동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 몇 년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았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에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이 많았음.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긴급고용장려금과 같은 고용장려금과 재정지원일자리창출과 같은 직접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

● 코로나19라는 노동시장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직접일자리창출 사업 등이 확대된 측면이 있지만 이후 재편되는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지난 기간 추진되어 온 정책 대응을 분석하고 향후 여성노동 정책을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

- ▶ 상대적으로 긍정적 성과를 보인다는 고용서비스정책은 진로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사후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이며, 그 성과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과 같은 각 세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음. 인턴십과 같은 직접일자리사업도 성과를 위하여 취업알선과 같은 고용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정책의 통합적 관점과 분석이 매우 중요함.
- ▶ 여성대상 사업(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도 있지만 타 정책에서의 여성참여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에 과거 추진된 정책들을 분석하여 정책의 배분과 그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이후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과 인력수요에 맞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본 연구가 기여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사업의 여성참여와 여성노동시장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 배분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임.**

- ▶ 또한, 외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여성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영역별 성과와 바람직한 자원배분, 여성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조사 및 분석결과

●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현황과 여성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 우리나라의 주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현황
  - 전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예산은 2018년 192,312억원에서 2021년 305,131억원으로 증가하였는데 동기간 약 58.7% 증가. 해당 기간에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확장적인 정부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 등이 존재

<표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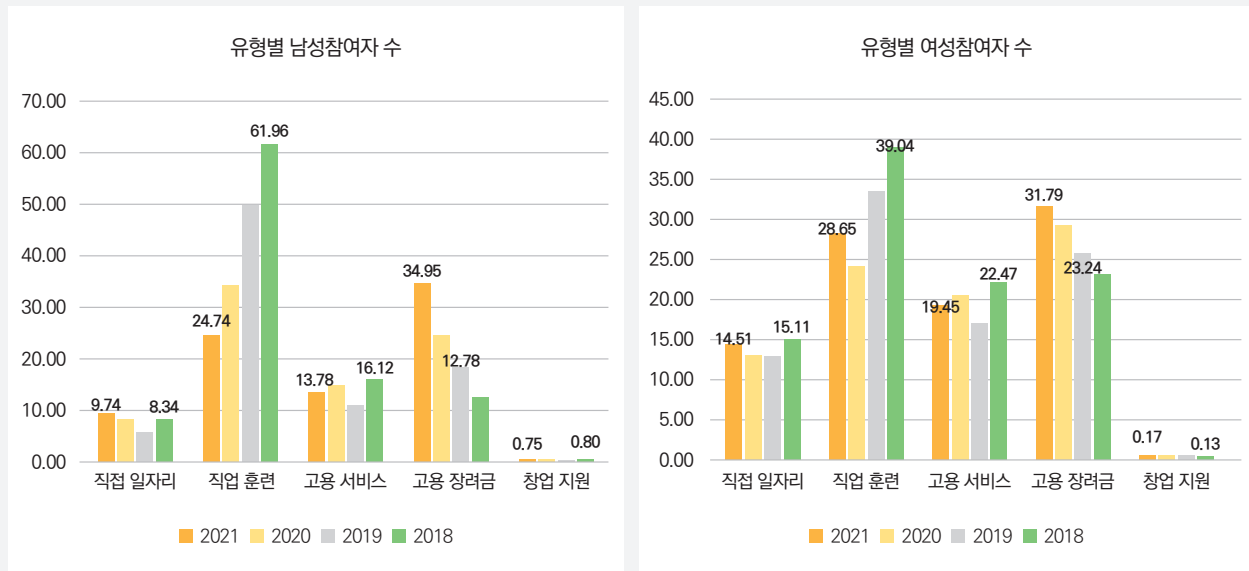
	계	직접 일자리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창업 지원	실업소득 유지
2021	305,131	31,599	22,648	17,330	84,106	24,071	125,377
2020	254,998	28,587	22,434	11,994	64,950	23,585	103,447
2019	212,374	20,779	19,610	9,867	57,883	25,097	79,139
2018	192,312	31,961	20,645	9,354	37,879	24,475	67,998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고용정책 및 통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현황, 「202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현황」,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 유형별 참여자 수 비중의 변화는 성별로 다소 다른 양상임. 남성의 약 62%에 달하던 직업훈련 참여 비중은 24.7%까지 낮아졌고 대신 고용장려금 참여 비중은 약 13%에서 약 35%까지 높아짐.
- 이러한 변화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큰 흐름들이 지난 4년간 크게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전통적인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의 주요 목표인 고용가능성 제고보다는 직접 취업을 지원하는 인건비 부담으로 정책의 비중이 옮겨갔음을 의미

<그림 1> 성별 유형별 참여자 비중의 변화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2018~2021), 한국고용정보원 내부자료, 일자리사업평가시스템(EPAS)(2018~2021)

####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여성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 한국고용정보원의 2018-2019년도 DW고용노동행정 자료(10% 무작위표본자료) 활용하였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고용효과를 보기 위해 6개월, 12개월 내 취업을 했는지 여부를 로짓모형으로 분석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참여변수는 8가지로 유형화. 선택편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SM(Propensity Score Matching)의 방법을 활용.
- 6개월 이내 취업확률을 로짓분석한 결과 매칭 후에는 훈련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참여자의 취업성고가 비참여자의 취업성고에 비하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6개월 이내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은 훈련+취업알선+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집단이며, 이어서 훈련+실업급여 집단, 이어서 훈련+알선 순으로 나타났음.
- 여성 표본만을 대상으로 분석 결과 6개월 내 취업확률을 분석해 본 결과, 훈련만 참여한 집단에는 6개월 내 취업확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훈련+취업알선+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집단, 훈련+실업급여 집단, 훈련+알선 집단 순으로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12개월 내 취업여부 역시 매칭 후에는 6개월 내 취업확률과 마찬가지로 정책참여자의 취업확률을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여성 표본만을 대상으로 12개월 내 취업확률을 분석한 결과, 전체 표본에 비하여 훈련과 알선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특징적인 것은 실업급여만 받은 여성은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달리 음(-)의 값이 나타나는데, 이를 훈련이나 알선 등과 결합시키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odds ratio를 비교하면 전체보다 여성들에게 정책효과가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 매칭 표본의 상실 후 6개월/12개월 내 취업

d_almph	6개월 전체		6개월 여성		12개월 전체		12개월 여성	
	Coef.	Std. Err.	Coef.	Std. Err.	Coef.	Std. Err.	Coef.	Std. Err.
훈련	-0.421	0.044	-0.504	0.056	-2.612	0.023	-2.709	0.031
알선	0.083	0.015	0.062	0.019	-0.263	0.009	-0.252	0.012
실업급여	0.257	0.014	0.147	0.019	-0.932	0.007	-0.987	0.009
훈련+알선	1.243	0.084	1.247	0.104	-1.382	0.034	-1.367	0.043
훈련+실업급여	1.280	0.102	1.371	0.127	-0.733	0.043	-0.698	0.053
알선+실업급여	0.471	0.020	0.409	0.026	-0.731	0.011	-0.730	0.014
훈련+알선+실업급여	1.449	0.123	1.411	0.141	-1.079	0.047	-1.009	0.055
연령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학력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상실 전 산업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지역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상실 전 사업장 규모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상실 전 직업	통제		통제		통제		통제	
female	-0.135	0.011			-0.062	0.004		
_cons	-0.354	0.208	-0.188	0.321	-1.052	0.041	-0.720	0.07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DW고용노동행정 자료(2018-2019)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보수에 미치는 영향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매칭된 표본으로 분석하면, 아무 정책도 참여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할 때 알선은 매칭 전과 마찬가지로 유의하게 부정적이었으며, 실업급여는 유의하게 긍정적이었음. 알선과 실업급여의 조합은 보수에 유의하게 긍정적이었고 훈련+알선+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집단은 유의하게 부정적이었음.
- 여성은 매칭 표본의 경우에도 남성에 비하여 유의하게 보수가 낮았고, 상실 후 재취득에 소요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의하게 보수가 낮아짐.

<표 3> 매칭표본의 정책참여 집단 재취득 후 보수

lnmpay_h2	전체		여성	
	Coef.	Std. Err.	Coef.	Std. Err.
female	-0.2470	0.0032		
훈련	0.0056	0.0125	0.0104	0.0158
알선	-0.0820	0.0042	-0.0688	0.0054
실업급여	0.1344	0.0037	0.1300	0.0050
훈련+알선	-0.0006	0.0154	-0.0023	0.0185
훈련+실업급여	0.0282	0.0185	0.0424	0.0217
알선+실업급여	0.0272	0.0057	0.0432	0.0072
훈련+알선+실업급여	-0.0567	0.0231	-0.0341	0.0265
상실~취득기간	-0.0001	0.0000	-0.0001	0.0000
연령	통제		통제	
학력	통제		통제	
상실 전 산업	통제		통제	
지역	통제		통제	
상실 전 사업장 규모	통제		통제	
상실 전 직업	통제		통제	
_cons	13.7466	0.0816	13.6267	0.114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DW고용노동행정 자료(2018-2019)

- 종합적으로 볼 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분석 결과가 아주 일관되지는 않음. 원인은 여성 내부의 이질성에서 크게 기인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10% 표본 분석 때문일 가능성도 있음.
-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설계할 때, 여성 전체에 일괄 적용하는 것 보다는 현장 담당자의 상담과 지원을 통해 집단 특성에 맞게 가장 적절한 조합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장의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함.

##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여성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효과

- 국가별 시계열 자료인 불균형 패널자료로 OECD 국가의 1990~2020년간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하였음. 실업률에 미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실업률이고 독립변수는 전년도 실업률, 거시변수, 적극적노동시장 정책변수, 제도, 여성노동시장 관련 변수들임.
- 거시경제 변수는 실업률에 강한 효과를 보이며 이에 비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총액의 영향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음. 인플레이션 효과는 거시변수만을 고려했을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변수를 함께 포함한 모형에서는 매우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음.
- ALMP 지출 변수를 영역별로 세분하여 분석한 모형2에서, 직접일자리창출과 창업지원은 각각 실업률에 부의 유의한 영향과 정의 유의한 영향이 있었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들이 영역별로 매우 엇갈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제도효과는 ALMP지출 및 거시경제 변수에 더하여 고용보호제도의 경직성이 실업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였음. 고용보호제도가 경직적일수록 실업률이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음.

<표 4> ALMP 영역별 지출, 거시경제, 제도 변수 효과

	모형1		모형2	
unemp_all	Coef.	Std. Err.	Coef.	Std. Err.
직전년도실업률(전체)	0.8209***	0.0266	0.8056***	0.0265
인플레이션	-0.1634***	0.0378	-0.1903***	0.0370
외국인직접투자	0.0112*	0.0058	0.0112**	0.0057
GDP(1인당) 로그값	-3.8857***	1.0812	-4.9990***	1.1066
GDP 성장률	-0.2250***	0.0189	-0.2185***	0.0186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지출(GDP 대비 (%))	0.5312	0.4239		
고용서비스 지출(GDP 대비 (%))			0.5197	1.7140
직업훈련 지출(GDP 대비 (%))			0.2844	1.1704
고용보조금 지출(GDP 대비 (%))			1.7386	1.1974
직접일자리 지출(GDP 대비 (%))			-3.9881***	1.1854
창업보조금 지출(GDP 대비 (%))			12.456***	3.5912
고용보호법제의 경직도(버전1)	0.9285***	0.3422	0.5922*	0.3417
노동조합조직률	0.0532*	0.0270	0.0211	0.0274
텍스웨지	-0.0075	0.0318	-0.0286	0.0321
_cons	39.7120***	12.1718	54.0249***	12.4627
sigma_u	1.6920		1.8149	
sigma_e	0.8375		0.8137	
rho	0.8032		0.8327	
R-sq:			R-sq:	
within = 0.8694			within = 0.8783	
between=0.7351			between = 0.7315	
overall = 0.7655			overall = 0.7639	

자료: OECD.Stat(1990~2020) DB.

▶ OECD 국가의 여성에 미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효과

- ALMP의 효과가 전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과 여성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지출액 효과는 유의하지 않다는 데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별 지출에서는 그 영향이 다소 다름. 전체 실업률에는 직접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만이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여성 실업률에는 고용서비스가 매우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 고용서비스 정책은 여성들에게 더 유용한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제도 효과는 그다지 영향이 없었고 젠더관련 변수들의 영향이 모형2에서 다소 나타남.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에서 여성실업률도 낮은 경향이 있고, 성별 고용률 격차가 높으면 여성실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성별 임금격차나 모·부성휴가 기간 등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음. 국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국가 유형별로 볼 때 출산율이 영미 자유주의 국가, 북구 사민주의 국가, 대륙 유럽국가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들은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특징을 보임. 성별 고용률 격차가 큰 경우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여성들이 실업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임.

<표 5> 여성실업률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

	모형1		모형2	
unemp_f	Coef.	Std. Err.	Coef.	Std. Err.
직전년도실업률(전체)	0.6525***	0.0773	0.6063***	0.0728
인플레이션	-0.0319	0.0685	-0.0574	0.0592
외국인 직접투자	0.0311**	0.0132	0.0290**	0.0118
GDP(1인당) 로그값	-7.7475***	2.6293	-10.4703***	2.3639
GDP 성장률	-0.1276***	0.0350	-0.1048***	0.0302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지출(GDP 대비 (%))	-0.9412	1.0801		
고용서비스 지출(GDP 대비 (%))			-9.1632***	3.3218
직업훈련 지출(GDP 대비 (%))			1.3200	2.6915
고용보조금 지출(GDP 대비 (%))			3.0167	3.3407
직접일자리 지출(GDP 대비 (%))			-4.1642**	1.6761
창업보조금 지출(GDP 대비 (%))			15.4785***	5.5201
고용보호법제의 경직도(버전1)	-0.8608	0.9537	-1.3061	0.8395
노동조합조직률	0.0370	0.0676	0.0044	0.0650
텍스웨지	-0.0175	0.0748	-0.0628	0.0718
합계출산율	-1.8968	1.1521	-2.1772**	1.0632
성별 고용률 격차	-0.1226	0.0764	-0.1640**	0.0705
성별임금격차	-0.0691	0.0497	-0.0146	0.0456
어머니 유급육아휴직기간	-0.0133	0.0110	-0.0076	0.0094
아버지 유급육아휴직기간	-0.0184	0.0212	-0.0264	0.0187
2세 이하 보육시설 이용률	-0.0345	0.0243	0.0131	0.0264
가구 소비지출	0.0814	0.3879	0.0573	0.3481
_cons	94.1727***	30.0513	125.792***	27.1889
sigma_u	2.3728		2.9549	
sigma_e	0.7616		0.6464	
rho	0.9067		0.9543	
R-sq:			R-sq:	
within = 0.8869			within = 0.9242	
between = 0.6426			between = 0.5290	
overall = 0.6631			overall = 0.5591	
F(16,57) = 27.92			F(20,53) = 32.31	

주: \*\*\*는 99%, \*\*는 95%, \*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  
 자료: OECD.Stat(1990~2020) DB.



- 거시경제의 충격은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침. 이 결과들은 여성들이 노동시장 충격에 더 취약함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결과들임. ALMP가 이러한 충격에 대응하는 도구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거시변수의 변동 시 여성노동시장에 대한 대응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국가 유형별로 출산율이 높은 영미 자유주의 국가, 북구 사민주의 국가, 대륙 유럽 국가는 여성의 취업률도 높은 특징을 보임. 모·부성휴가 제도 자체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고용률이 높은 것이 아니며, 제도 자체보다는 활용률이 높은 북구 사민주의 국가들에서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이 모두 높다는 사실 등이 확인됨.

## 정책제언

### ▶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개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보다는 패키지 유형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성과가 더 나은 것을 알 수 있음. 향후에도 정책 조합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다양한 메뉴들을 활용하여 각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설계하여 이들의 취업 및 근로조건 개선에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주로 사업주 지원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보조금 사업이 성별로 고르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직업훈련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4년간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직업훈련 비율은 감소. 성별로 불균형한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의 집행시 이를 평가하고 환류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 여성노동시장 정책의 방향

- 경기변동이나 노동시장 충격에 여성들이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여성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서 중요한 집단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장기미취득자로 간주된 집단의 비율은 약 23%에 달함. 장기미취득자의 인구학적 특성상 여성은 30대와 전문대졸 학력집단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의 취업취약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OECD 국가별 분석 결과, 공공고용서비스 정책이 여성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임. 그런데 유의하여 볼 점은 동아시아 국가 및 동유럽 국가들은 여성실업률도 낮지만 고용률도 낮은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여성의 비경제활동 비율이 높기 때문임. 우리나라도 경력단절 여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 구직자 대상의 정책은 노동시장 이탈 자체를 완화하는 데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를 보다 넓게 잡고 활성화(activation)에 둘 필요가 있을 것임.
- 여성들의 취약성에 기반을 둔 노동시장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장기실업자로서의 노동시장 취약성, 성별 직업분리 등 기존의 성별 노동시장 구조에 기반한 채용 및 경력개발상 불리함, 출산 및 양육 시기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서 오는 불리함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임.
- 동시에 취업지원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에서 양육이나 돌봄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등이 함께 제공되어 여성이 노동시장 참여에 더 어려움을 겪는 요인들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음.



#### ▶ 고용서비스 정책의 성인지성 강화

- 새정부는 고용서비스 정책의 혁신을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와 ‘기업도약패키지’로 추진하고자 하였음. 고용서비스 정책의 개선과정은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정책이 패키지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각 정책들은 성과는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음.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 취약성을 식별하고, 취약 집단을 식별하여 표적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정책 집행의 전 과정에 성인지적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특히 장기미취업자는 구직자가 아닐 수 있어 이들이 체계적으로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음.
- 성과중심 지원체계가 지나치게 중시되면 실질적으로 더 취약한 집단에게 두터운 지원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가 실질적으로 더 취약한 집단에게 더 적합한 지원이 되도록 대상자 식별이 고도화될 필요가 있음.
- 기업도약 패키지 역시 성별로 격차가 발생하는 등 취약한 집단에게 적절하게 정책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정책 수립 및 집행시 각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해당 이슈들이 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여성특화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 성과에 대한 점검과 이를 토대로 한 이후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 성과 면에서의 차이들을 중심으로 모든 정부사업의 성별 분리 통계, 주요 정책과제의 성별 영향평가 및 고용영향 평가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져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강화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2018~202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고용정책 및 통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현황, 「202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현황」,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한국고용정보원, DW고용노동행정 자료(2018~2019)

한국고용정보원 내부자료, 일자리사업평가시스템(EPAS)(2018~2021)

OECD.Stat(1990~2020) DB.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인력개발과

관계부처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